

社説

관세와 強달러 다 잡은 트럼프, 다음 전략은?

경제포커스

나지홍

논설위원



일본·EU(유럽연합)에 이어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 일본이었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일본이 세 곳 중 처음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을 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중 최저 세율”이라며 큰 성과로 내세웠다. 스콧 배스턴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기 힘든 혁신적인 자금 조달 매커니즘”이라고 추켜세웠다. 투자 펀드가 일본의 히든 카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며칠 뒤 미국은 이 히든 카드로 EU와 한국을 압박해 각각 6000억달러, 35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관세율도 일본과 똑같은 15%로 정해졌다. 일본이 애써 준비한 히든 카드가 미국의 필승 카드로 활용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고 완승(完勝)을 거뒀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15%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땐 관세를 못 물린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자유무역의 원칙이던 상호

이익은 사라지고,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 남게 된 것이다. 1854년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시키고 체결한 ‘미·일 화친조약’처럼 제국주의 열강이 약소국을 강제로 개방하고 맺은 불평등조약과 다를 바 없을 정도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인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려 50%의 관세를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부과했다.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 지대)의 옛 이름은 스

한·일·EU와 타결한 관세 협상은 미국에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 弱달러 카드를 비축한 트럼프 언제든 환율 전쟁 불붙일 수 있어

틸벨트(Steel Belt·철강 지대)였다.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가 트럼프의 지론이다.

트럼프의 최대 성과는 달러 가치를 건드리지 않고 관세를 관철한 것이다. 원래 이번 관세전쟁의 출발은 미국 무역 적자 개선이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수지는 통화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달러 가치가 강해질수록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트럼프도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약(弱)달러를 선호한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달러 가치 하락엔 부작용도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다. 물가에 민감한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그랜데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강(強)달러를 유지하면서 관세만으로 무역 수지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환율 전쟁이란 비장의 카드를 쓰지 않고 아낀 것이다. 이번에 아낀 카드는 언제든 꺼낼 수 있다. 미국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희생시켰던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자 트럼프가 약달러주의자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 이사으로 지명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란은 미 대선 직후인 작년 11월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징벌적 관세 부과와 약달러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미란 보고서’로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란은 제2의 플라자 합의인 ‘미라라고(트럼프의 별장 이름) 합의’를 주장했다.

최근 흐름을 복기해 보면,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제 금융 석학 배리 아이컨그린 UCB클리 교수는 “관세와 환율 정책을 결합하면 보호무역의 파괴력이 더 커진다”고 경고해 왔다. 관세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하기보다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정의아트 스토리 [594]

아일랜드의 심장

18세기 초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 건축가 토머스 버(Thomas Burgh·1670~1730)의 감독 아래 처음 완성된 도서관의 ‘롱룸(The Long Room)’은 길이만 65m에 이르는 장대한 공간이다. 처음에는 단층이었으나, 1801년 이곳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간 서적을 제출받는 법정 납본 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장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결국 1860년 아치형 천장과 2층 서가를 갖춘 지금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말하자면 당시 롱룸은 온 세계의 지식이 모여드는 장소였다.

롱룸에는 고서 20만 권과 함께 아일랜드의 ‘심장’이라 부를 만한 세 가지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9세기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제작한 ‘켈스의 서’, 아일랜드 현존 최고(最古)의 하프로서 기네스 맥주사의 로고에도 등장하는 ‘브라이언 보루(Brian Boru)의 하프’, 마지막으로 1916년 발표된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이다. 이 세 유물은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증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롱룸’은 계몽주의 시대 인류의 지식에 대한 이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중



토머스 버, 구도서관의 롱룸, 1712~1732년 건립, 1860년 개축, 트리니티 칼리지.

앙 복도, 하늘을 닮은 둥근 천장, 좌우 대칭의 서가에 크기 순으로 정렬된 서적은 지식이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그 광대한 세계 속에서 각 책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확신을 시각화한다. 이곳은 어둠과 무지의 세계를 이해와 통제 가능한 세계로 전환시킨 계몽주의 시대의 지적 열망을 압축해 보관한다. 물론 현실은 도서관 분류 기호와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도서관 서가를 바라보면, 저 끝 어딘가에 조화롭고 정연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위안부 항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임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

이 밖에도 사면 최종 명단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 있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시 전 성남시장이사면됐다. 은 전 시장은 지역 조폭 관련으로도 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다. 이응구 전 차관은 현직 법무부 차관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이 이런 범행을 하는가. 그런 사람이 사면되면 법의 권위는 어떻게 되나.

이뿐만 아니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

수년 내 40만 병력도 붕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군 병력이 6년 새 무려 11만명 줄어 45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 50만명 유지를 계획했으나 벌써 5만명이 부족해졌다. 육군에서만 10만5000명이 감소해 32만4000명이 됐다. 지원병과 장교가 많은 해·공군에 비해 징집병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육군에선 20년 동안 사단 17곳이 사라졌다. 저출생으로 병력 감소는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악할 정도다. 여기에 주한 미군 감축 움직임까지 겹쳤다.

로봇·AI 등 과학 장비로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그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된다. 미래의 전장도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상군만 100만명이다. 북한군이 아무리 낙후하고 원시적이라 해도 병력 차가 이렇게 크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문제는 병력 감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연간 출생아가 24만명 수준으로 감소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

연 전 교육감도 사면 명단에 들었다.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됐는데도 조 전 교육감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이번에 사면까지 받았으니 더 당당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에까지 사면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마치 안면몰수하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했다”고 했다. 뇌물 수수와 택시 기사 폭행, 교사 부당 채용은 국민 통합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대통령이 이런 사면을 한 건 이들이 내민 대선 청구서 때문일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사면된 정치인 상당수는 문제인 정부 인사들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좌파 시민단체,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라는 배경이 있다.

야당은 이런 사면을 뒤에서 거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했고 그대로 반영됐다. 그 의미 없는 명단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했고 지나쳤다.

에 1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 추세면 수년 안에 병력 40만명도 붕괴한다.

이제는 여성 군 복무도 금기 사항일 수 없다. 논란이 크겠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이미 여군은 잠수함 근무, 전자 조종까지 하고 있다. 1만9200여 명이 복무 중이다. 우크라이나 여군은 드론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 군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여성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 경험이 있는 50·60대 남성을 경계병 등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지금 50·60대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군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 군사 기업(PMC)도 활성화하고 있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데 수당만 더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병력 절벽이란 시한폭탄이 타지기 시작했다. 우리 현실에 이보다 심각한 국가 현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출 규제 약발도 한 달, 빨리 공급 대책 나와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도 8월 들어 한 주 만에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7월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속도라면 8월 증가액은 작년 8월을 빼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공급 대책 없이 대출만 조인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기적 공급 부족과 그에 대한 심리적 우려다. 서울 등 수도권은 신규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재건축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에 발이 묶여 있다. 내년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27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줘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돈을 풀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는 등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당초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하면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에는 없다”며 신도시를 신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 정부의 실패’ 등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처럼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룰수록 일이 커진다. 그런데도 ‘불장’으로 변진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국토부 장관의 인신은 늦어졌다. 규제 대책 발표도 시장 기대보다 늦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등-규제-잠시 진정-다시 폭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오른쪽 캄박이
키고 좌회전

미국 조선업 살린다고?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1년에 5천여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할 수도 | 배는 언제 만드나 | MASGA 장담 못한다



◀ 2022년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파업 현장.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업체의 교섭을 허용토록 한다. 1년 내내 이 같은 파업이 계속될 것이다. 1년 내내 교섭하느라 배는 1척도 못 만들 수 있다. © 뉴데일리 DB

《마스가 프로젝트》와 ‘노란썩수법’

기업 죽이는 노란썩수법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다. 한국에선 빨리 가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속도를 줄여야 할 그 순간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면 얼마나 위험할까.

제도 도입 시 사회문화적 환경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선 제도가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 《노란봉투법》이 그렇다.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한국은 정치과잉이다. 《노란봉투법》은 자칫 한국 경제의 싹을 노랗게 만드는 《노란썩수법》이 될 수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를 향해 원청업체 경영자 상대 교섭 장구를 활짝 열어 놓도록 강제하는 게 바로 그 법이다. 사용자 개념도 대표자 말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로 확대된다. 대기업 소유주를 정조준한 것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도 제한한다. 게다가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자는 것.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경우,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는 약하지만 노조는 강하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머릿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노조 파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정치적 이윤이 돌아간다. 인간소외를 막자는 노동쟁의가 정치 행위로 변질되면 이는 《노동쟁의의 정치화》다.

미국 조선업 살리려면 노란봉투법 중단해야

큰 우려 속에 대미 관세협상이 가까스로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관세 15%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다. 그중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2000억 달러(약 278조 원)는 반도체 원천 2차 전기 바이오 분야 투자 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 규모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섭은 계속된다.

조선업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권 와일드카드였

다.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미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했다. 《마스가》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얼마만큼 기대가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MASGA가 산으로 가버리면?

조선업은 하청업체가 매우 많다. 불법 파업에 배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노조들은 과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쟁의 행위도 가능해진다.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딱 그 경우다. 《마스가(MASGA)》도 산으로 갈 수 있다. 아직 대미 교섭은 모두 끝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목을 쥔 수 있다. 어

떤 기업은 협력사의 수가 5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모든 협력업체와의 노동쟁의를 감당하려면,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해도 모자랄 것이다. 《생산성 제로》상태가 된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 정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창)》 역시 큰 우려감을 표했다. 이 마당에 한국 투자를 모색할 외국 기업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꼭 유리한 것도 아니다. 파업 리스크 때문에 대기업이 한국을 떠나면(오프쇼어링), 하청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과 비슷한 원리다.

지금 정부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행동은 반대다. 오른쪽 캄박이를 켜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고 있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8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7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